

시·도지사 간담회

■ 노 대통령 인사말

반갑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을 텐데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최근 헌재 결정에 대한 사후대책에 관한 것이다.

나는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으로 좁게 보면 안 된다. 당장 충청권 민심이 어렵고 단체장들도 당황하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국한된 문제로 다루면 안 된다. 균형발전이라는 전체의 틀로 봐야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로 보면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충청권 단체장들의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의 이해관계, 지역간 대결로 보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접근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 묶여있는 문제로 보고 풀어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을 모두 모셨다. 한번 터놓고 얘기했으면 한다.

나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승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도 승리자일 수도, 패배자일 수도 없다고 본다. 결국 국가 전체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이런 것인데, 못돼도 영원히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이후에 잘 수습하고 관리해 나가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지혜를 모아가자.

오늘은 행정수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오늘 정면으로 대화한다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균형발전 3대법을 포괄적으로 전체적 틀에서 영향을 함께 짚어보고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모아지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일년 반 동안 참여정부는 수도권정비규제를 풀었는데, 서울과 지방이 침례하게 대립하지 않았다. 상당부분 수도권 규제를 개선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공포도 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시끄러웠겠지만 대체로 각 시도지사들이 극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수임해주고 자제해줬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개선에 반대하기보다는 지방의 균형발전에 힘을 모아줬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 균형발전 공약에 의한 선불이라고 생각하며 추진했고 양해도 구했다.

기업도시 얘기도 나오는데, 처음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100여개 정도 생각했다. 그것을 용이하게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혁신도시, 첨단 지식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이전하는 기관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고, 도시는 지방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된다. 그것이 지방혁신도시의 개념이다. 기업도시 개념은 전경련과 협의해도 구체안이 안 나왔는데, 지방혁신도시 개념이 나오니까 기업도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다. 기업도시와 지방혁신도시가 결합이 된 것이다. 지방혁신도시가 기업도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일 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서비스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 레저관광도시도 이참에 함께 가자고 해, 3개의 목표가 하나로 묶여져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3가지 목표가 각기 별개의 것이었다. 지방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방혁신 도시의 조건이 신행정수도로부터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거리를 통해서 지방과 행정수도간의 유기적 통합,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원활한 환경을 보장받는 조건이 결합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수도가 안 되니까 행정도시로 하자고 하지만, 아무결정도 못 내렸지만, 행정도시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공공기관 일부가 신행정수도로 예정된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맞물려 있는 과제다.

변화된 상황에서 조정할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 방향제시 정도라도 있으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마리라도 주면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건교부장관이 옆에 있는데, 국토배치계획과 교통망도 새롭게 설계했는데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떻게 풀지 의견 달라. 각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아닌 30년, 50년 이후에 한국의 미래를 놓고 국토와 국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논의해 보자.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감사하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걱정은 가득하다.

여기지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밀고 가자, 그런 의견도 있고, 어쨌든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해보자는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어쨌든 행정수도 문제는 잘 모르겠고, 분권과 균형발전만은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냥 접으라는 말도 있다. 접으면 문제가 간명해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여하튼 밀고 가자는 말은 현재결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니 정부로서는 할 수 없다. 충청도민들도 오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고 해서 원안대로 가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현재 결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충청도민들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뭔가 가능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요청해주시는 것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더러 현재결정에 저촉되는 어떤 정책추진을 하라고 하면 대통령도 난감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취지는 살리고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에 인천시장, 경기지사님, 접어버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큰 틀에 있어서의 정책의 목표와 관계해서도 가능한가 라는 논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조용해지냐, 경기도에 앞서서 보면 접어버리면 조용해질 것도 같은데, 충청도 지사가 생각해보면 그거 접으면 절대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렵다.

그 다음에 정책의 측면에서 접으면 적절하냐, 접더라도 균형발전 할 수 있

지 않느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시끄러운 것은 접어버리고 안 시끄러운 것만 가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지방 쪽의 단체장님도 계시다. 시끄러운 것 접고 안 시끄러운 것으로 가자, 인천시장님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시끄럽지는 않고 실제로 시끄럽든 시끄럽지 않던 이것을 접어버리고 균형발전으로만 갈 수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우선 수도권 문제의 접어버리고도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의문을 제기하겠다. 수도권 과밀은 오래 전부터 국민 모두가 우려한 현상이다. 그래서 성장억제 도시로 지정하고 수도권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각종 규제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과밀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신행정수도, 또는 큰 행정기능의 이전 이외에 또 다른 과밀해소방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과밀은 문제가 없다고 국가적 논리가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답이 나와야 한다. 또 다른 과밀해소방법이 있는가 하고……. 실제로 수도권의 규제라는 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지방에 계셔도 사실이라고, 사실로 보리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이것은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이다. '베세토'라는 개념도 나오고 했지만, 서울 인천 개성, 경기 이 지역이 포괄적으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역이 된다. 이미 지금의 서울 경기도도 질적으로 좀 수준이 다르고 아무리 지방균형발전하더라도 지방도시와는 뭔가 내용이 다른 새로운 도시개념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규제개혁 없이 그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스스로 한번

대답을 찾아봐야 한다.

나는 반드시 수도권 규제개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규제개혁이 지방의 동의없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질문해보고 싶다. 가능하다고 하면,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일방주의가 되고 말 것이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경쟁력에 큰 장애가 된다. 말하자면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사태일 수도 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합의해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해서 수도권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대로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한때 결국 그것이 국회에서 부딪히면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가자면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달리 획기적인 지방발전이 있어야 한다. 지방발전은 한시를 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지방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얘기에든 불구하고 이해관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지역주의는 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구 많은 지역이 국회의원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 많은 지역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됐을 때, 그것은 이미 통합된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어서 지방의 정치적 발언권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인구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한때 우리가 한국을 영남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한때는 반대로 호남공화국이라고 비방을 한 때도 있었지만 그 용어를 한번 그대로 대입시켜, 실질적으로 한 지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인구, 정치적 대표권을 가지고 일방적 정책이 추진됐을 때,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느냐. 경제적인 문제,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문

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는 모두 서로 존중해야 한다. 모두 존중 하되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 양보해서 어떤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주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방도 생각해 보면 그렇다. 행정수도 같은 것, 충청도 지역문제는 덮어놓고, 전국 균형발전이나 걱정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드려보겠다. 사실 각 부처, 행정부처는 서울에 떡 버티고 앉아 있고, 공공기관 당신들만 지방으로 전부 가라 하면 그 정책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을만한 대통령의 권능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약속을 했다.

행정수도로부터 한 시간 거리 안에서 그리고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다. 왜 그런 약속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쪽 했는데, 공공기관이 그러한 조건이 보장 되지 않는 지방이전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빠지고 혁신도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다.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우리는 짚어가면서 생각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이것은 접어놓고, 중간다리는 접어놓고 바로 건너뛰자 하다가 건너뛰지 못하고 보폭이 짧아서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민을 해보자.

이런 요소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지방혁신추진협의회, 혁신 추진체계, 혁신클러스터, 혁신을 중심으로 하나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도시의 재배치를 통해서 결합시켜나가자는 것이 아닌가. 재배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

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방침은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수도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발표해 놓았다. 이 내용을 좀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대안이라도 마련되지 않고, 균형발전 정책이 힘을 받아서 쪽쪽 뺏어나갈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장수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누더기가 되면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 서지 않는다. 선비가 아무리 똑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도 갓이 찌그러지고 도포가 구겨지고 얼룩이 묻은 도포를 입고 가면 그만 선비로서의 품위가 살지 않고, 말이 위엄을 갖출 수가 없다. 지금 어려운 것은 저는 국회결의 믿고 정책 추진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투구가 좀 찌그러졌다.

지금 이 문제를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조차 원만한 수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 분권이고 균형발전이고 여기에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많은 저항들과 부딪쳐가면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왜 분권이 많이 안 됐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된 것이고, 균형발전 왜 안 됐냐,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그 전과는 다르게 힘차게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꼭 법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 불가피한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큰 틀에서의 사고를 해 달라. 대통령 한번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개인적으로 생색내고 기 한번 살리겠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 분권과 균형발전도 무너질 수 있다. 절대로 다른

데 남용하겠다고, 남용할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했던 정책, 여러 차례 거듭거듭 확인한 정책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겠다. 구체적인 취지와 효과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대안들, 어느 정도로 살릴 것이며 어느 범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서도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도 수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폭넓은 여지를 남겨둔 것 같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저촉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균형발전의 효과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여야간에도 마련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더 고심해주시고 적절한 기회에 조언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다.